

의대 1509명 증원 확정...의사들 “집단 행동” 강력 반발

27년만에 증원 ... 전공의 복귀 않고 의대생들 수업 거부 파행 지속
의료계, 30일 옛 전남도청 광장 등 전국 6곳서 동시다발 촛불집회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된 데 반발해 의료계가 항의 집회 등 전국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은 물론 의료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40개 대학에서 종전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대입전형위원회는 시·도 교육감과 대학 총장·교과 교장·학부교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13명이 참석해 회의 1시간 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교협과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대입 계획을 비롯해 의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으로부터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대학들이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입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같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300명이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의원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의료계가 수가 인상과 함께 의대 정원 감축을 제안했고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19년간 동결됐다.

정부는 2010년 이후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 의대 증원을 하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2018년 공공의대 신설 계획과 10년간 4000명 증원안을 내놓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의협은 이날 증원 확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

이 참담할 뿐"이라며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0여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 대다수가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번 주 전국 동시다발 집회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과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30일 밤 9~10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광주·전남북 지역 개업의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은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강원과 충청, 경상,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KIA 1위 질주 신나는 팬들... 챔필은 연일 '만원' 26일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9차전 경기가 열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전광판에 전석매진이라는 글자가 띄워져 있다. 이날 매진으로 챔피언스필드는 시즌 12번째이자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18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내놓는다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 '선구제 후회수'는 제외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하루 전날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의 이달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 발표를 통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선구

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하디제 와서 반대만 하느냐"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청년들에 외면 받는 광주 '청년 공간'	▶6면
KIA, '광·광·광' 대표로 꿈 잡았다	▶18면
호남의 누정 원림 - 담양 명옥헌	▶22면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